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40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고민정 · 김영호 · 박상혁
김준혁 · 김동아 · 김문수
박정현 · 박성준 · 김한규
허 영 · 박지원 · 이용선
이병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6가지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용 용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대부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어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으로 폐교의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고시한 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제5조제2항 중 “그 절차”를 “가격평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를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를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으로, “지원시설로”를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8. (현행과 같음)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생략)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 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
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③ 시·도 교육감이 「인구감
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
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
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
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
시·군관리계획의 변경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
도 폐지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격평정 및 절차-----
-----.
③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4. (생략)

④ (생략)

⑤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

-----.

1. -----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2. -----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3.·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u>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 나.·다. (생략) 2. <u>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u>지원시설로</u> 사용하려는 경우 3.·4. (생략) <u><신설></u>	----- ----- ----- ----- ----- <u><삭제></u> 나.·다. (현행과 같음) 2. <u>중앙행정기관의 장</u> 및----- ----- ----- ----- -----<u>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u>----- 3.·4. (현행과 같음) 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u>사용하려는 경우</u>
--	---